

평히 맞서왔다.

현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대체로 인권을 존중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간통죄 자체가 구시대의 산물이고 시대 변화에 따라 사문화돼 폐지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봤다.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프랑스대혁명 때에 없어졌던 간통죄를 되살렸지만 197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관련 조항을 폐지했다. 미국은 20여개 주(州)에 간통죄가 남아있지만, 처벌이 거의 없어 사문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회 일각에서는 간통죄 폐지로 가정 보호와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가치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이들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대검찰청은 4월에 후속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1천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공소취소 등을 단행했다는 내용이었다.

우선 간통죄로 수감 생활을 하던 9명은 현재 결정 당일 석방됐다. 수사를 받던 598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1심 재판 중이던 335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다. 항소심·상고심 재판을 받던 28명은 무죄를 구형하고, 기소됐지만 재판이 열리지 않던 87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소취소장이나 무죄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노동개혁과 청년실업, 쌀값 폭락, 역사 교과서 국정화, 빈민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현 정부의 실패와 불통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을 시작으로 다음 달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온 국민이 반대하는 교과서 국정화를 당장 폐기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전면 보장하라”고 말했다.

집회는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사태는 그때부터 시작했다.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을 시도했고, 이들의 청와대 진격을 막아서는 경찰과 세종로 일대에서 충돌했다.

경찰이 청와대 쪽으로의 행진을 막기 위해 경찰버스로 차벽을 치며 원천봉쇄에 나서자 시위대가 강력히 반발하며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시위대는 대부분 복면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당기며 차벽을 붕괴시키려 했으며, 쇠파이프와 각종, 새총, 망치, 철제 사다리 등으로 경찰 병력을 폭행했다. 보도블록을 깨서 던지고 인근 건물에서 소화기를 가져와 경찰관에게 뿌리기도 했다. 버스 위에 올라선 경찰관에게 철제 사다리로 때려 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나왔다. 횃불이 등장하고 버스 주유구에 신문지를 넣고 불을 붙여 경찰이 긴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시위대는 밤늦게까지 경찰과 지속적으로 충돌했다. 서울 도심에서 공권력이 사실상 실종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경찰의 대응은 강경했다. 집회 관리를 위해 240여개 부대, 2만2천여 명의 경찰력을 배치한 경찰은 과격한 시위대를 향해 살수차를 활용해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뿌리며 진압에 나섰다. 권총형 캡사이신과 소화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 ‘폭력시위 vs 과잉진압 논란’... 민중총궐기 집회

### ■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격렬시위로 경찰과 밤새 충돌

2015년 11월 14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린 반(反) 정부 집회·시위는 우리 사회에 큰 후유증을 남겼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 진영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53개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극단적인 폭력·과격 행위로 얼룩지면서 집회·시위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거셌다. 또한 시위대 가운데에서도 중상자가 발생하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도 이어졌다.

본 집회는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시작했다. 행사에 앞서 각 단체들은 대학로와 태평로,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사전 집회를 하고서 서울광장에 집결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의 수배를 받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오후 1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조합원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합류했다.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13만 명, 경찰 추산 6만8천 명으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였다. 참석자들은



▲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개최한 정부 규탄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참가자들이 행진도중 차벽을 무너뜨리려 하자 경찰이 캡사이신과 물대포 등을 발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백남기(69) 씨가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 물대포를 맞을 당시 경찰버스에 연결된 밧줄을 당기고 있던 백 씨는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다.

집회 후유증은 상당히 오래 갔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과격 행위자 51명을 검거한데 이어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했더라

도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시위대에게 줄줄이 소환장을 보냈다. 경찰이 연말까지 수사한 사람은 1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18명이 구속됐고, 660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출석요구를 했다.

불법·폭력 시위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 이틀 뒤인 11월 16일 경찰의 추적을 피해 조계사로 은신한 이후 25일간 숨어 지내다 경찰이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압박 강도 수위를 끌어올리자 자진퇴거한 뒤 구속됐다. 경찰은 한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핵심 지도부에 대해서도 구속하거나 불구속입건하는 등 강력한 수사를 벌였다.

### ■ 경찰, 폭력시위 ‘강공모드’에 민주노총 등 ‘과잉진압’ 거센 반발

또 11월 21일에는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단체 사무실 12곳을 등시다발 압수수색해 각종 시위용품과 사전에 민중총궐기를 준비한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폭력·과격 시위의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배후에서 이를 조종한 단체의 책임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함으로써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특히 폭력시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 위해 경찰청에 전담팀을 꾸리는 등 강력한 사후조처에 나섰다.

경찰 전담팀은 불법·폭력 시위로 파손되거나 시위대에 빼앗긴 차량 52대와 카메라 등 장비 143점, 시위 대응 과정에서 다친 경찰관과 의무경찰 92명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억 8천여만원의 손해액을 산정했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이처럼 강력한 사후대처에 나선 것은 더 이상 불법·폭력 시위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집회 장면이 일부 방송사 뉴스를 통해 생방송되면서 불법·폭력 시위 장면을 안방에서 지켜본 국민들이 진보진영 단체의 극렬 행위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된 것이다.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 공안정국 조성 의도 비판 등도 이어졌다.

경찰이 물대포에 대해 ‘안전한 이격 장비’라고 주장한 반면 진보진영 단체들은 이번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백남기 씨 사례를 들면서 물대포가 무기나 다름없으며, 살수는 시민에 대한 공격 행위여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이어갔다.

경찰이 시위대의 상반신을 조준해 고압으로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팔목골절, 두피열상, 흉채출혈 등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경찰이 물포에 섞는 합성캡사이신(PAVA) 최루액이 돌연변이 유발, 발암, 심혈관독성, 신경독성, 사망 등에 이르게 하는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라며 사용금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집회·시위 자유와 폭력 집회의 부당성,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이어지자 유엔에서는 마이나 키아이 ‘평화

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으며, 키아이 보고관은 “한국에서 최근 수년간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계속 후퇴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과 보수단체는 엄연한 불법인 폭력시위로 인한 일반 시민의 피해, 우리나라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편향된 조사결과라며 반발했다.

## 롯데그룹 형제 간 경영권 분쟁

### ■ 개요

신격호(95) 총괄회장이 창립한 롯데그룹은 현재 한국 재계 5위의 대기업 집단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두 아들,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현 롯데그룹 회장의 치열한 경영권 다툼은 2015년 7월 그룹 오너 부자(신격호-신동빈) 간 ‘해임 공방’으로 처음 세상에 드러났다.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2016년 3월까지 한·일 양국에 걸쳐 신동주·동빈 형제 간, 신격호·동빈 부자 간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정상 여부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결국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대리인) 지정 재판으로써까지 확장된 상황이다.

지난 2000년 옛 현대그룹의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약 6개월 만에 계열 분리로 일단락된 것을 감안하면, 롯데 사태는 국내 5대 그룹 사상 최장기 경영권 분쟁으로 남게 됐다.

### ■ 2014년 말부터 내연…결론없이 지루한 공방

2014년 12월에서 2015년 1월 사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주회사 일본



▲ 롯데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신동주-신동빈 형제의 후계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15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로 출근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